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의 국제적 의의와 한반도

▌ 일 시 2015년 3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 오후 8시

▌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세미나)
IVY홀(만찬)

▌ 주 최 동북아역사재단, 한러교류협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후 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2015년 3월 13일(금)

● 개회식 (14:30-14:40)

- 개회사 :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회장)
- 환영사 : 김현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제 1세션 (14:40 -16:20)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

- 사회 : 김현택 (한국외대)
- 발제 : 고재남 (국립외교원)
  고상두 (연세대)
  엄구호 (한양대)
  장덕준 (국민대)
  홍완석 (한국외대)

● Coffee Break (16:20-16:30)

● 제 2세션 (16:30 -18:20) : 특별 라운드 테이블
'전승 70주년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한반도'

- 사회 :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 발제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패널 :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前 주러대사)
  Alexandr A. Timonin (주한 러시아대사)
  박 진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회외교통일 위원장)

● 알렉산드르 A.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부임 환영 만찬 (18:30-20:00)

목 차

제 1세션

고재남 | 한반도 주변정세 진단과 대러 정책 과제 13

고상두 |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 21

엄구호 |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모스크바 전승행사 27

장덕준 | 통일기반 외교와 한러협력 31

홍완석 |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 37

제 2세션

김학준 | 전승 70주년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한반도 47

● 제 1세션 (14:40 -16:20)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

- 사회 : 김현택 (한국외대)
- 발제 : 고재남 (국립외교원)
  고상두 (연세대)
  엄구호 (한양대)
  장덕준 (국민대)
  홍완석 (한국외대)

한반도 주변정세 진단과 대러 정책 과제

고재남(국립외교원 교수)

1. 한반도 주변정세의 특징

(1) 북핵문제 지속하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이견 지속

o 북핵문제는 북한의 변화 거부, 군사적 도발 위협,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과 연계되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3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핵무기 8개 내지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음.

o 북핵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적 생존력 강화 수단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공고화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 즉 북핵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음.

o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6자회담의 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6자회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o 현 단계에서 6자회담 참가국간, 특히 북한과 한·미·일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관한 타협이 없는 한 조기 재개 가능성은 많지 않음.

-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미·일은 북한이 영구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가 취해야 6자회담 재개에 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부재 등 한·일/중·일 갈등의 지속

o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부가 역사 수정주의 및 보통국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한·중간 갈등이 심화되어 오고 있고, 그 결과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o 한·중·일 3국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치·외교·안보 환경(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중·일 FTA, 6자회담, 중·일 군비경쟁 등) 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아베 정부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해 태도변화가 없는 한(영토분쟁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 아베 정부 이전의 한·중·일 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3)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심화와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 강화

o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서방세계에 대한 맞제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출구전략으로서 중국, 한국, 중앙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o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극동·동시베리아 발전의 도모, 역내 경제권으로의 편입 확대, 역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외교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는 현재 대중/대북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4) 북한의 대러/대중 관계의 재조정 추진과 러·북 관계 개선

o 북한 냉전기 소·중 갈등을 이용한 소·중 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중립 정책 또는 한 국가에 경사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국익우선의 실리추구 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음.

o 중·북 관계의 경우 2003년 3월 시진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로 변화되었음.

-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취임후 지난 7월 초 북한 대신 한국을 방문했으며, 소련말기 고르바초프처럼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전임자들보다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의 강화, 한·미 군사협력의 확대 등 동북아 전략환경을 중국에게 불리하게 하는 조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는 경향 때문임.

- 한편 친중파이자 중·북 관계의 연결고리였던 장성택의 숙청도 중·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o 북한은 이러한 러·중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 대응해 국내외적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현재 러시아 경사적 대중/대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 결과, 러·북 관계가 푸틴 3기 정부 출범후 크게 개선되어 왔음.

- 그러나 중·북간 정치·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양자관계에서 중국에게 대북 관계가 더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대북 정책 추진에서 전략적 함의

(1) 기회 요인

o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기회요인은 '러·북 관계의 개선'과 유엔의 대북 인권 압박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라고 볼 수 있음.

- 최근들어 러-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것과 달리 러·북 관계는 2013년부터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완공과 경협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2014년 4월 러시아 부총리의 평양방문과 경협확대 합의, 5월 대북 채무 재조정 합의, 9월 북한 외상의 모스크바 방문 등 양국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음. 러·북 관계의 긴밀화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촉진은 물론 러시아를 통한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은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더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의 완화정책을 추진케 할 것임. 북한이 인권압박에 대해 예민한 것은 유엔 인권결의안이 김정은 등 북한 최고 지도부를 책임자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임.

O 또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와 '일·북 관계의 개선'도 남북관계를 위해 잘 활용할 경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북 관계는 작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중국은 가장 긴 접경국이자 전통적 동맹·우방국가로서 주변 4강중 북한과 가장 높은 경제·에너지 상호의존성을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공산당/노동당 일당독재 국가임. 따라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주변 4강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는 물론 북한의 국내외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정책도 어떤 측면에서 남북한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나, 일·북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 식민지배 보상과 경협확대는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일·북 관계가 개선되어 일본의 대북 식민지재 보상이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2) 위기 요인

o 현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기회요인보다 위기요인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6자회담의 중단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지속, 유엔의 대북 인권 압박정책과 한국의 동참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악화 가능성 증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지역 분리주의 지원에 따른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협정'(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 및 NPT 가입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지원, 영토통합성 유지, 안전확신 등을 명시한 러, 미, 영, 우간 협정)의 위반에 따른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축소, 미국의 한국내 사드(THADD) 배치 계획과 북한, 중국, 심지어 러시아의 반발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3. 러시아의 대북 정책 및 예상 태도

(1) 정치·외교 부문

o 러시아는 2011년 8월 메드베데프·김정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러-북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신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우려 오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러·북 관계가 제1기 푸틴 정부(2000-04)때와 같은 밀착관계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임.

o 러시아에게 김정은 체제의 탄생과 국내외 정책의 변화, 중·북 관계의 소원화, 북한의 국제적 고립,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동방정책의 강화 등은 대북 정치·외교 협력을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푸틴 정부에게 대북 관계의 개선은 가스관 연결 및 TSR-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을 성사시켜 남북러 3국간 에너지 공동체와 물류망 통합체를 실현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국내외 여건의 개선, 국제적 고립 완화, 대중국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서는 접경국가이자 정치·외교·경제적 후방 지원세력인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o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사안별 대북 정책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음.

- 6자회담의 경우,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협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우릴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주장하는 선행조치의 부분적인 이행을 북한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에게 미·북 직접대화를 재차 주장할 수도 있음.

-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러시아는 한반도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반대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임.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HEU를 통한 핵개발도 계속 반대할 것임.

- 남북관계의 경우, 러시아는 남·북한이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길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음.

-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의 경우,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외부세계의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반대할 것 임.

- 미국의 한국내 사드(THADD)의 배치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 주도의 NATO MD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으며, 비록 한국내 사드 배치가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가져다 주지 않을 지라도 한국내 사드 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대응태세의 강화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략환경을 불안정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 또는 비판할 것임.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중국과 미국의 MD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2) 경제·에너지 부문

o 지난 5월 러·북 경협 및 방산 협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의 해결로 러·북간 경협이 점차 증가할 것이나, 양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경협증대는 불가능할 것임.

o 경제·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의 사안별 대북 정책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음.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경우,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북/대한 정책을 강화시킬 것이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

- TSR-TKR 연결사업의 경우, 러시아는 작년 9월 완공해 가동중인 하산-나진간 철도연결을 TSR-TKR 연결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까지 연결하는 TSR-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러·북 경협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여건 개선 및 러·북 경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되어 러시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음. 물론 최근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로 경제·금융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러·북간 전통적인 경협기반이 회복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러·북 경협의 활성화는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나진·하산 경협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의 경우, 러시아는 현재 철도연결과 임차한 나진항 일부를 현대화해 물류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3년 11월 한·러 서울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국 기업의 Rustrans(러·북 나진 경협프로젝트) 지분 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우릴 것임.

(3) 군사·안보 부문

o 러·북간 군사협력은 한·소 수교후 미진했으나,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2001년 7-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후 러·북간 군관계자 교환 방문, 방산물자 매매 등 군사협력이 점증하기 시작하였음.

o 그러나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사태의 발생, 러시아의 PSI 참여 등 대북 제재 동참, 그리고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외환 부족 등으로 방산물자 구매과 같은 러·북간 군사협력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부재한 상태로 발전됨.

o 2011년 8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신형 무기 구입을 통한 재래식 군사력 강화 등 군사부문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했으나, 군수물자 부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군 인사교류 등 군사협력 부문에선 약간의 성과가 있었음.

o 한편 대북 핵정책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제3기 푸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 정책을 독자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단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이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상황에서 한국, 일본 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은 북한의 핵 폐기 보다는 핵 비확산을 저지하는 정책으로 대북 핵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으며, 제3기 푸틴 정부도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비확산 저지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o 향후 양국간 군사협력은 방산물자의 경우 부품분야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안보협력도 6자회담의 실무그룹 차원과 신 조약의 안보협력 조항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 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국의 MD 참여 반대 등 러·북간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4. 한국의 대러 외교·안보 협력의 과제

(1)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여 등 정상회의의 정례화, 빈번한 고위급 전략대화 등을 통한 통일외교의 강화

(2) 북핵 등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협력 확대

(3) 지역·글로벌 수준에서 안보 협력 실질화

(4) 실질 경협 확대, 신 경제협력 액션플랜 채택 등을 통한 경제 동반자 관계의 구축 및 강화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양자 협력 확대

(6) 러·북 관계 긴밀화를 북한 개혁·개방의 촉진 및 남·북·러 3각 협력의 확대로 활용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

(7) 양국 의회간·지역간 협력의 활성화

(8) 남·북·러 학술회의 개최 등 3국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

고상두 (연세대학교)

■ 한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유사성

- 지정학의 개념 : 지정학이란 국가의 국제적 위상은 영토의 크기와 위치 등과 같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개념.

- 한국의 지정학적 역사 : 한국은 수천 년에 걸친 영토위축의 역사를 가졌음. 만주벌판까지 확장되었던 한국인의 삶의 공간이 한반도로 줄어들었고 다시금 남북으로 나뉘어졌음. 그리하여 대륙국가에서 반도국가로 그리고 대륙의 섬이 되어버렸음.

-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 : 러시아는 3차원의 영토확장 역사를 가졌음. 시베리아, 북극, 우주공간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음. 구소련의 붕괴는 러시아 역사 최초로 영토의 축소를 가져온 사건임.

-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정책은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의 지정학적 발전방향을 뒤바꾸는 반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물론 한국의 지정학적 혁신을 가져오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임. 한국은 유라시아 협력공간을 만들어내어 극동이라는 주변부적 위치에서 벗어날 것을 모색하고 있음.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극동의 개발과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 확대: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 에너지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 그동안 유럽 편중적인 에너지 수출을 동북아로 다변화하려고 함.

-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국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함.

■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통합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창설

-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창설은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 함께 3국이 공동 출범하였음.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선제적으로 제의하는 탓에 서방과 대립하게 되었음.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계획임.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구 소련의 복원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성사됨

- 더구나 러시아는 몽고, 북한, 베트남, 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과거 소련의 우방국을 초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베트남과 FTA 협상을 하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화 노력임.

- 러시아는 오랫동안 탈소공간의 경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음. 이것은 서방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구소련 독립국가들을 지역적으로 결집하려는 대응노력임.

- 1991년 소련 붕괴직후 신생 독립한 소련공화국 중에서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를 창설하였음

- 1993년 CIS에 우크라이나,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이 추가된 경제연합(Economic Union)을 출범시킴.

- 1995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중심으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함.

- 1998년에 관세동맹에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면서 이름을 공동경제공간 (Common Economic Space)으로 바꿈.

- 2000년에는 공동경제공간에 타지키스탄을 포함하면서 이름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으로 바꿈.

- 2003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이 이름뿐이었던 공동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을 재출범시킴.

- 2007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다시 원점에서 관세동맹을 시작하였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결속성과 실행성에서 과거의 관세동맹과 차이가 있음. 그리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법이 발효하였음.

- 2012년 관세동맹이 공동경제공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회원국간에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5년 1월 기존의 관세동맹, 공동경제공간 등의 발전 연장선상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하였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장애요인

- 총 규모의 경제가 작음: 2013년 국내총생산을 합한 수치로 볼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조 4300억 달러로서, 중국의 9조 1800억 달러, 유럽연합의 12조 7200억 달러, 미국의 16조 8000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자원의 비중이 높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은 자원생산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상호보완성이 낮고 국제자원가격의 부침에 따른 취약성이 큼.

- 중국의 영향력: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들은 역내보다 역외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큼.

- 러시아의 지배적 구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독일이 회원국 중에서 경제강국이지만 군사강국은 아님.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면에서 회원국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있음.

- 경제주권의 제약에 대한 우려: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동부 우크라이나 독립 지원은 러시아가 구소련을 구성했던 지역 중에서 러시아인 밀집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리하여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그는 카자흐스탄의 독립에 위협이 된다면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유라시아연합”보다 “경제연합”을 더 강조함.

- 미국의 견제 : 미국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구소련 복원을 위한 시도라고 보고 견제하고 있음.

■ 푸틴의 신동진정책의 추진

○ 신동진정책의 목표

- 푸틴 대통령은 2006년 12월 국가안보회의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키로 결정함.

- 소득이 낮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와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신동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동진정책의 배경

- 구 소련시대 극동지역은 아태지역과 단절된 고립지역이었음.

- 옐친시대 극동지역은 시장경제 개혁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많은 주민이 모스크바와 상트뻬쩨르부르크 등지로 이주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푸틴시대 극동지역의 부흥을 위한 신동진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임.

○ 신동진정책 추진사업

- 제도적 개편: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하고 시베리아-극동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함.

- APEC 정상회담의 유치: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신동진정책을 선포함. 푸틴 대통령은 APEC회의가 극동지역 발전의 시작이라고 언급함.

- 극동연방대학의 설립: 극동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극동지역의 대학들을 통합하여 연방대학으로 승격시키고, APEC 회담장을 캠퍼스로 제공함. 러시아에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연방대학은 7개 존재함.

- 극동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의 수립: 미개발 자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수송인프라 건설, 도시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해 1997년 동부가스 개발프로그램, 2004년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계획, 2009년 에너지전략2030, 2013년 자바이칼사회경제프로그램 등이 수립되고 추진됨.

○ 러시아 신동진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의 협력 효과

- 러시아 정부가 신동진정책으로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며, 한러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방한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동진정책이 상호 부합한다고 평가함.

-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취약한 제조업등으로 한러간에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협력 잠재력이 높은 중요한 파트너임. 러시아는 자원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다변화를 하기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화 정책의 추진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러시아가 큰 기대이익을 가지고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효과로 1990년 대비 현재 인구 20%가 감소하고 있는 극동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라시아 연계망 건설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해외 물품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의 이동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기여할 것이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장 어려운 연결지점인 북한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러북관계간의 신밀월관계

- 2002년 이후 10년간의 공백 이후 2011년이 되어서 극동에서 메드베데프-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됨.

- 구소련 붕괴이후 25년 동안 미해결되었던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소련 채무의 90%를 탕감하는 법적 절차를 2014년에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10%인 10억달러는 러북 경협사업에 사용하기로 함.

- 현재 2만명 수준인 러시아내 북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14년에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러북간 무비자 협정을 논의하기로 의제로 설정함.

- 북한의 철도현대화를 위한 포베다 프로젝트 착공식을 거행함. 이 사업은 향후 20년간 북한 철도의 60%이상에 달하는 3,500km에 달하는 철로, 터널, 철교 등을 개보수하는 작업으로서, 2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충당할 것임.

- 루블화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였음. 러시아의 JSC 대외개발은행과 북한대외무역은행 및 북한통일개발은행 간에 외환거래 계좌를 개설하였음.

- 양국은 2015년을 "러북친선의 해"로 선포하였음.

■ 모스크바 전승일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참석 방안

○ 참석의 필요성

- 중국과 북한은 참석 확정, 쿠릴열도 문제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참석할 경우, 동북아에서 한국만 불참하게 됨.

- 모스크바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주선 하에 북러, 북중, 북일 정상회담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음.

- 모스크바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그동안 2차례의 개최지였던 북한이 아닌 제3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시도이며, 진보정당에 이어 보수정당이 추진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 또한 정상회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필요없음.

○ 한국의 참석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큰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이 러시아에 대하여 기대하는 가장 큰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임. 따라서 이 두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다면 참석을 강행할 것임

-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문제 해결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여,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함.

- 금년 7월에 추진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 행사가 북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주선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모스크바 전승행사

엄구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I. 서론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은 풀릴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기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번 정부가 야심차가 내새웠던 동북아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그 추동력이 사실상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이 동시 초청될 가능성이 있는 다자회의들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바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4.22~24 인도네시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5.9 모스크바), 항일 전승기념식(9.3 베이징) 등에 과연 한국 정상이 참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행사들은 이미 제도화되고 정례화 되어 있고 그 개최목적이 분명하여 한국이 적극적 참여하는 것에 논란이 없지만 상기한 행사들은 주최국의 의지가 반영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행사로 참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익과 관련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남북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해서 그 결정이 쉽지 않다. 더하여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그 결정은 매우 어렵다.

특히 이 행사들 특히 모스크바 전승행사와 베이징 전승행사는 별개의 행사가 아니라 각기 묘한 정치적 연계성을 갖고 있어 보다 큰 틀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년은 수교 25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모스크바 전승행사 참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참석과 불참에는 분명한 논거가 필요하며 국민과 관련국에 그 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II.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역할

올해는 한러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고 2008년 9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국의 정치·경제발전은 기대에 못 미쳤고 양국의 협력 의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철도, 에너지, 전력 등 의제만 반복되어 양국 관계의 피로감을 증폭시켰으며 양국 모두 과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지에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한마디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양국관계가 미·러관계에 동조화됨으써 북핵문제에 한정되는 측면이 강했고 경제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기조에 구속되어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결과하였기 때문이다. 양국의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 제고가 북핵 이외의 양국 외교관계의 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북핵문제에서의 공감대 형성의 전제적 조건이지만 한러 경제협력관계가 아직 시장실패적 요인이 많아 양국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러관계는 양국 정상들의 결단이 없다면 수사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 차원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한·러관계가 기대에 못 미친 가장 큰 이유는 외교 대상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의미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인식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우리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북한에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국으로 보느냐(소극적 포용), 아니면 러시아 극동지역이 남·북·러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동북아에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러시아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보느냐(포괄적 포용), 더 나아가 한국이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동북아 신질서 형성의 핵심국으로 보느냐(거시적 지역 질서 포용)하는가에 대한 중장기 외교전략적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한·러관계 발전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 형성의 여러 제약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동북아에너지 공동체 형성,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동북아 다자안보 질서 형성에서 통일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의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가속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대외정책의 전략적 입지가 매우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대안적 파트너라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보다 강화되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우리의 대중 외교적 입지를 매우 축소시킬 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데 고려해 보아야 할 나라가 러시아이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하고 한국이 대륙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조력자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잠재성장률 3.5%에 머물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 자원공급자, 물류 연결자가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과 이번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가상의 섬나라가 되어 버린 한국이 북방대륙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한 국가전략이어서 외교 특히 통일과정에서 협력을 얻어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구소련 지역이나 중동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지정학적 손실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신중한 타협(guarded rapprochement)'의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개발에서의 한·러 및 남·북·러 협력의 성사는 한반도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에서 러시아의 보다 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반미전선 확대의 '긴장의 교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북·러관계의 개선이 남·북·러 협력에 순기능으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러간 신뢰와 소통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주로 경제통합을 통한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러시아 내에서 나오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러시아 동아시아 에너지 전략 실현(국가 에너지 안보재단 K. Simonov 사무총장), 러시아 현대화(카네기 센터 D. Trenin 소장), 극동시베리아 발전과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 입지 강화(MGIMO의 D. Lavin 교수)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12월 KIEP 세미나에서 발표된 러시아극동연구소의 제빈(A. Zhebin) 박사와 수슬리나(S. Suslina)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 합의에 따른 통일은 러시아 GDP를 2013년 대비 2~3% 증가시킬 것이며, 협력에 의한 경제통합 방식도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송유관 연결 러시아 수익만 연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III. 모스크바 전승행사 참석 여부 결정의 원칙

첫째, 통일외교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국제공조 유지의 균형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변동성이 강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먼저 국제공조를 훼손할 경우, 추후 반복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북 국제제재 레짐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주변 강대국들에 적용을 요청하기 어려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사 참석 결정에 김정은 참석 여부를 최우선 변수로 생각하지 말고 주최국과의 관계 그리고 참석 결정의 국제적 파장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참석 또는 불참 결정의 견고한 논리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거가 국민과 관련국들에게 실효적인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해 親中化 우려감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 결정이 줄 한·미관계 줄 파장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러관계가 악화되어 신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 정부는 5월 모스크바 전승행사의 박대통령 참석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9월 베이징 전승행사 참석은 냉각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4월말 또는 5월초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전후로 TPP 타결과 '미일방위협정지침' 개정이 합의된다면 보다 강화된 미·일동맹은 한국에게 베이징 참석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8월경 발표될 아베담화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베이징 참석은 한·일관계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러·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구상' 실현에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양국 행사의 불참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참석 또는 불참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석한다면 통일외교의 실현에 있어 한·러 및 한·중관계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THAAD 배치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불참한다면 전승행사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 및 한·러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계획의 의미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러 정상회담'과 '남·북·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및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사이의 대북정책 공조체제가 무너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승행사의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한국 대통령 참여의 정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느냐 여부이다. 모스크바 전승 행사의 경우 연합국의 힘으로 광복을 맞았지만 분단 또한 그 외세의 개입으로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이중적 의미를 준다. 중국 전승행사의 경우 항일 전승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6·25 전쟁의 중공군 개입이라는 분단 고착의 의미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에 대항하여 승리한 전승 기념의 계기를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라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제2의 해방, 즉 분단 극복을 위해 세계(특히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의 분단 극복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와 북한 주민에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는 전향적 자세 필요함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베이징 행사 참석은 중국과의 반일 연대가 아닌 미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동아시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첫째, 모스크바 전승행사 참석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통일외교의 일환이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제 위에서 남·북·중, 한·일·러, 한·미·러, 남·북·일·러 등 다양한 협의체 외교의 신호탄으로 하여 창조적 통일외교의 시동을 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러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고려 등 중국과 러시아 행사 참석의 부담을 균형화하는 역동적 외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참석이던 불참이던 신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 김정은의 참석 여부, 미·일의 반응, 아베담화 등 고려해야 할 불확실 요인이 많은 가운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나 참석 또는 불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석 또는 불참의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커서 소기의 외교적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교의 정당성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은 서둔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가변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승행사 참석여부를 김정은 참석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김정은이 돌연 참석을 취소하거나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그리 성과가 없는 경우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에 준비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무관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한·러 관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스크바 전승행사 참석 여부를 베이징 전승행사 참석 여부와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전승행사 초청 수락 부담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볼 때 중국 초청 수락 부담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양국 행사 참석 여부를 상호 연계시켜 결정의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압력 하에 모스크바 전승행사 참석의 부담을 베이징(중국 전승행사)도 참석함으로써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모스크바 불참을 한일관계 악화의 부담을 안고 있는 베이징 불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징(중국 전승행사)에 참석하면서도 한일관계 악화의 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러시아 전승행사)의 참석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기반 외교와 한러협력

장덕준(국민대학교)

1. 통일기반 외교의 필요성

2014년 새해벽두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준비를 선언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2014년 3월 독일 방문 중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통일대박론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한측에 제안함으로써 향후 통일준비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통일준비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년 7월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준위가 통일준비 관련 의제를 마련하고 통일부가 이를 집행하며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통일에 관한 홍보 및 여론 수렴의 기능을 담당하는 등 관련기관들 간에 통일준비에 관련된 역할을 분담하게 된 모양새를 갖추었다. 특히 이 기관들 가운데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통일 준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헌장 제정을 포함해 2~3년 내에 통일준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통일준비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각론에 치우친 나머지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의 통일을 지향하는지, 그러한 통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가 진행해온 논의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보건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남북한 철도연결, 경제협력 등 미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에서도 통일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음식을 장만하듯이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통일은 남북한 간에,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관련국들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일의 대외적인 여건을 성숙시키는 “통일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한국정부의 통일준비가 북한정권의 붕괴 유도를 통한 흡수통일의 준비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뿐만 아니라 관련국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원칙 하에 민족통합과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함께 국내에서도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통일준비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대국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는 한반도 유관국들에게 통일한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평화와 화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통일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통일외교를 위한 대러시아 협력방안, 그리고 정책제언으로서 박 대통령의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참석문제 등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두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첫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의 국익에 해롭지 않다고 본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이웃한 러시아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어느 특정 강대국이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좋은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한국은 철도, 에너지, 농업 및 임업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현대화와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의 개발을 위한 적합한 협력 상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러시아가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 좋은 진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어느 특정한 방식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1년 2월 한국방문 기간 중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에 우호적인” 새로운 통일한국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창출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과 통일과정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한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핵심적 국가이익과 배치되지 않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북한의 체제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는 러시아도 중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는 스스로 한반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매우 유용한 정치적 자원으로 본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과거 김정일의 통치 시기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 시기에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왜냐 하면 일단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역내 지정학적인 야망을 억제하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3. 러시아와의 협력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남북한 통일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통일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전문가 그룹, 경제인,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대러 공공외교를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기업인 포럼, 한러대화(KRD)를 포함한 1.5트랙 형태의 포럼, 대학생, 청년 등의 차세대 교류사업,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러시아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러시아인들에게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극동개발 등 러시아 경제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신뢰형성과 화해협력의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부터 한러 사이에 그리고 북러 사이에 주기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교통 및 물류 협력, 전력망 연결, 가스관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삼각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북러 국경지대에 국제산업 단지를 건설해—또는 북중러 국경지대에 광역 두만강개발 프로젝트(GTI)를 가동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러시아 극동개발—그리고 중국의 경우 창지투 개발프로젝트—의 배후단지로 활용함으로써 각 관련국 사이에 호혜적인 이익을 창출함은 물론,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 통일을 향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러 협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 공유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러 양국의 공동 노력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무부 및 국방부 등 정부 당국자 사이의 전략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의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결정 그룹, 학계,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 내지는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지나친 미국 편중외교와 냉전적 사고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상황의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 러시아 협력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 현대사와 국제관계, 그리고 통일문제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대 러시아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박 대통령의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대해

지난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미국과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정상들이 크렘린의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월 9일 밴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러시아 전승절 참여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한국 정상의 러시아 방문을 반대하는 듯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 반면 러시아 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해오고 있다. 이래 저래 초청장을 받아든 청와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논평가들은 박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은근히 한국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한국이 얻는 것은 별로 없이 푸틴이 벌이는 잔치에 들러리만 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교적 망신만 당하고 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국내외에서 박대통령의 방러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음에도 박 대통령은 오는 5월 모스크바 전승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참석이 유력한 만큼 박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남북정상의 조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러시아의 중재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러협력을 재확인 하고, 수년간 중단되어 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약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박대통령은 푸틴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이득이다. 김정은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것이라거나 더 나아가 외교적 망신을 할 것이라는 일부 논자의 지적은 지나친 단견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쌍무적인 이해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개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러시아의 지지라는 중요한 자산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관계 개선, 유라시아 북방외교의 본격적인 전개 등 장기적인 이익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셋째, 이번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식은 그 성격상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할 행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 낸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소련은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이 된 것인데 한국의 국가원수가 굳이 모스크바에 가서 승전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암흑을 빠져 나온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과 러시아가 나치의 침공으로 인해 2,6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대조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압제와 침략의 만행으로부터의 해방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점에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박대통령 참석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이 보다 순조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푸틴의 초청을 거부할 경우, 한러관계는 당분간 다소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만약 푸틴의 초청은 거절하고 오는 9월 중국의 항일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만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러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북방외교의 동력은 떨어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마저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남짓 흐른 현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주요 외교정책이

모두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 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통일외교와 유라시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협력 동반자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외교무대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난맥상을 보이며 표류하게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비전과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외교정책 구상 또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박대통령의 방러는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봄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북러관계가 밀착되고, 중러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우려되는 바는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완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만약 박대통령이 이번 5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남북러 3각협력의 본격 가동을 위한 물꼬를 트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드리워 질 수도 있는 냉전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일찍이 “외교정책은 가능성을 저울질 하는 기술(Foreign policy is the art of weighing possibilities)”이라고 했다.[1] 형식논리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히려 우리는 차분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는, 보다 지혜롭고 적극적인 경제 및 통일안보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명분이나 형식 논리를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준비의 모멘텀 유지, 경제적 영토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유지 등을 위해 창조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국제정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은 오는 5월에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1) Henry Kissinger, Reflec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October 1956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

홍완석(한국외대)

1. 들어가며: 한·러관계의 역사적 숙명성

2012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시아를 향한 외교적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아시아정책 정향, 즉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열세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회·극복하려는 보상기제적 차원에서도 비롯되지만, 2013년 2월 새로 채택된 '러시아 신외교정책개념'에서도 비중있게 언급되었듯이 21세기 아태지역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새로운 지리적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다는 명료한 인식에서 기인한 바 크다. 말하자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역내 질서의 핵심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해 나가겠다는 강한 야망을 내포하고 있다.

푸틴 정부의 신 동진정책에서 한반도는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공략 대상 가운데 하나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확보해야 할 핵심적 국익 측면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한반도와 다층적 수준의 이해관계가 증대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한반도가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보장해주는 동북아 지정학의 '허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현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지형 속에서 푸틴의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러시아 외무성의 수많은 공식 서류상에는 무엇이 러시아의 국가이익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접지역 한반도는 과거나 현재나 러시아의 국가적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고, 한반도문제의 조정과 동북아에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가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항상 러시아의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 영역 속에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소외되거나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깊은 이해관계를 투영해왔고, 여전히 투영하고 있다. 1896년 아관파천, 1905년 노일전쟁, 1945년 북한의 점령과 남북한 분단, 1950년 한국전쟁 등이 예증하듯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세력게임의 중요한 참가자로서 한국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

오늘날 모스크바가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국익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어떤 식으

로든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현과 배타적 국익 확보를 위해 힘과 영향력의 외부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푸틴 집권 3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관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반도국가 한반도가 제공해 주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관문으로서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 영역에 의거하여 21세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인식적 차원의 국가이익과 동기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안보이익과 정책목표

러시아 동북지역 안정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모스크바의 안보적 근심의 원천중의 하나이다. 두만강 끝자락을 경계로 약 17 Km의 국경선을 접한 한반도가 여전히 국제적 긴장과 갈등의 진앙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잠복성 분쟁의 지뢰밭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화를 저해하고, 상황 여부에 따라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의 안보이익상 개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한반도 무력분쟁 시 탈북 난민의 러시아 극동지역 유입은 크렘린에 적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부담이 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은 북한의 핵 시설뿐만 아니라 남한의 무수한 핵발전소 파괴로 귀결되고,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생태적 재앙을 가져다준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고, 일촉즉발의 긴장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는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하 러시아는 시장경제를 착근시키는 가운데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야하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은 푸틴 집권 3기에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장개혁의 심화, 정치·사회적 안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공고한 경제성장 등 내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대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러시아 동북지역에서의 안정이 특별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토의 서쪽 날개에서 나토의 동진팽창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지정학적 충돌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기 어려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론 푸틴정부가 국가발전 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서도 동부 국경선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접경지역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적 안보이익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최우선순위는 평화와 안정의 확보이다"라고 적시한 대외정책 문건에서도 잘 확인된다.

〈표1〉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안보이익과 정책 목표

국가이익	핵심 정책목표	세부 정책목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1. 한반도에서 과도한 군사력 집중 억제 2.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 남북한과 군사협력 증진을 통한 안보 영향력 확대 ·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 대북 핵 폐기 유도 · 북한의 NTP체제 재가입 유도 · 한반도 비핵지대화 ·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 · 러시아 주도 세계미사일통제체제(GCS)에 남북한 가입 유도 · 한국에 사드(THAAD) 배치 저지 ·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강 억지 · 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방역선 구축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안보적 차원의 정책목표는 남·북한간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전쟁 예방과 과도한 군사력 집중 억제로 요약된다. 여기서 전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이 초래하는 안보비용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실천적 정책목표로 러시아는 1) 대북 핵 폐기 유도, 2) 한반도 비핵지대화, 3)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 4) 북한의 NPT체제 재가입 유도, 5)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6)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미사일통제체제(GCS: Global Control System)에 남북한 가입 유도, 7) 한국의 미국 주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 저지, 8)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강 억지, 9) 남북한과 군사협력 증진을 통한 안보 영향력 확대, 10) 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방역선 구축 등을 추구한다.

3. 정치이익과 정책목표

푸틴의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자국에 유리한 지정학적 '컨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에 견고한 정치적 '닻'을 내리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권력정치를 흡인하는 블랙홀로서 한반도가 함의하는 국제적 성격에 기인한다. 그 국제적 성격은 미·중·러·일 등 동북아 4강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과, 한반도의 지배권 장악 여부가 동북아 나아가 아·태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직결되어 왔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전략가들 사이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알렉세이 보즈넨스키(A. Возненский) 교수의 다음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한반도상황은 일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아·태지역과 세계 군사·정치·외교·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좌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활동에서 배제될 것이다."

보즈넨스키 교수의 언술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이끌지 못할 경우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러시아 동북아전략의 '중추신경'으로서 한반도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유라시아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목표하는 푸틴에게 있어 한반도는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의 '시금석'이자,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대상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정치이익은 남북한문제의 중재자로서, 나아가 동북아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 확대와 남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목표로 러시아는 1) 남북한의 반러화 방지, 2) 남북한 상호협력적 대화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지지, 3)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4)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6자회담의 재개, 6)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자로 참여, 7)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전환, 8) 한미 동맹구조의 이완 또는 해체 등을 희구한다.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미국 및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독점을 억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창출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표2〉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치이익과 정책목표

국가이익	핵심 정책목표	세부 정책목표
한반도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세려균형 창출	1. 한반도문제의 이해당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 확대 2. 남북한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 강화	· 남북한의 반러화 방지 ·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해결 원칙 지지 · 북한체제의 안정화 유도 · 북한의 개혁 및 개방 지원 ·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북핵 6자회담의 재개와 중재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보장자로 참여 ·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전환 · 한·미 동맹구조의 이완 또는 해체 · 남북한에 대한 미국 및 중국의 영향력 독점 억제

4. 경제이익과 정책목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은 유럽세력인 러시아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이익은 적지 않게 제한받고 있다. 러시아는 2010년에 이르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초대받았고, 1998년에야 가입에 성공한 APEC에서도 최소한의 참여자로서 주변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또 일본은 미해결된 북방영토문제를 대러 경협과 연계하는 이른바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베리아 극동지역 투자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역동성이 침체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안보적, 인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크레믈린 지도부는 한반도, 특히 경제적 신화를 창조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신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이익 증대에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하나의 '출구'로 인식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으로서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첨단 선진기술력,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파트너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경제정책 목표를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네 가지 수준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아·태지역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한반도이다. 러시아는 영토의 70% 이상이 아시아에 위치한 관계로 늘 아시아·태평양세력의 일원임을 강조해 왔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시베리아·극동 경제를 아·태지역 분업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에서 결성된 다양한 형태의 다자지역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반은 낯설게 남아 있고 강한 민족감정과 이질적 문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태지역 정치경제질서의 중심부 세력인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유럽세력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모스크바의 아시아 진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가 ASEM,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정회원으로 초대받은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에서 높은 지경학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한국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확보와 역내에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활동영역의 확장, 이를테면 APEC, ASEAN, ASEM, EAS 등에서의 자율적 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둘째는 러시아의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시장으로서의 한반도이다. 세계시장에서 러시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 품목이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자원, 첨단무기, 원전건설 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세 가지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원전건설 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동시에 에너지자원의 수출과 다차원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무기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특히 대규모 무기 구매력을 구비한 한국은 러시아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집중공략 대상이고,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군의 육·해·공군 전력증강사업에 참여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셋째는 러시아 경제의 '사막지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적 원천으로서의 한반도이다. 러시아는 21세기 국가발전 대전략차원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지역의 낙후된 산업시설 근대화와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 및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한국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자본과 기술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대규모 경협 참여와 투자 확대

를 유인하고자 한다.

상기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정책 목표에 의거해 세부정책 목표를 제시해보면, 1) 러시아 경제특구에 한국기업의 참여 유도 및 확대, 2) 한국무기 시장 진입, 3) 한국의 첨단산업기술확보(조선/자동차/IT/NT등), 4) 남북한과의 교역 및 경협 확대, 5) 남 북러 삼각경협(TSR-TKR/가스관/전력망 연결사업) 활성화, 6)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6) 루블경제권으로 북한의 유인. 7) APEC, ASEM 등에서 한국과 협력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3〉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제이익과 정책목표

국가이익	핵심 정책목표	세부 정책목표
한반도와 지경학적 연계성 강화	1. 아·태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한반도	· 북한 희토류 광산 개발 참여 ·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 · 북한 원전시장 참여 · 루블 경제권으로 북한의 유인
	2. 새로운 수출상품 시장으로서 한반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 남북러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사업의 실행 · 남북러 3각경협의 추진 및 확대 · 남북한과의 교역 및 경협
	3.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적 원천으로서 한반도	· 한국의 첨단산업기술확보 (조선, 자동차, IT, 나노 등) · 러시아 경제특구에 한국기업의 참여 유도 및 확대 · 한국 무기 시장 진입 · 한국과 APEC, ASEM 등에서 협력 확대

5. 나가며 : 대한반도정책 기조로서 남북한 실용적 등거리노선

현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종합해보면, 먼저 '안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여건 확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도모하여 미국 및 중국의 과도한 지배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반도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한반도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진입의 교두보로서, 러시아의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시장으로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적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설정된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이익과 정치·안보이익을 엄격히 분리하고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등거리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신 러시아는 '친남소북(親南疎北)' 노선으로 요약되는 한반도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였다. 당시 옐친 주변에 포진한 서구적 개혁세력들은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익과 지정학적 위상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통적 우방국 북한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친서울일변도 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친 평양노선'(пропхеньянский курс)에서 '친 서울노선'(просеульский курс)으로의 급선회는 크레믈린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익 손상과 정치적 역할 축소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희망한 북한 경수로사업(KEDO) 참여 좌절, 한반도 4자회담에서 러시아의 배제, 한국의 대러 투자 소극성과 경협차관 상환독촉, 기대했던 한국 무기시장 진입 실패, 미국에 고정된 한국의 외교정향 등이 그 구체적 사례로서, 이는 남한에 대한 러시아의 실망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일련의 러시아 '푸대접'은 필연적으로 크레믈린의 불만을 증폭시켜 자구적 차원에서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1996년 옐친 집권 Ⅱ기부터 러시아는 북한과의 성급한 정치적, 군사·안보적 관계단절과 과도한 친남한 편향노선이 스스로 한반도에서의 역할 공간을 축소시켰다는 자성 하에 남북한 균형노선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남한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단절된 대북 관계정상화와 전통적 우호관계 복구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그런 추세는 2000년 푸틴 정권이 등장하면서 현저히 강화되었다. 푸틴 정권 출범이후 대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한 등거리 노선을 추진한 결과 러시아는 마침내 북핵 6자회담에 초대되었고, 철도와 에너지를 연결고리로 한 남북러 3각경협의 기회가 증대되었으며 남북한 모두와의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옐친시대 한반도에서 손상된 국익과 추락한 지정학적 위상을 만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푸틴의 실용적 남북한 등거리노선은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과 기회의 폭을 현저히 넓혀주었다. 이점을 명료히 인식한 크레믈린 전략가들이 향후에도 남·북한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푸틴 집권 1·2기와 메드베제프 정부가 견지했던 실용적 남북한 등거리 노선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국익증대와 지정학적 위상 강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푸틴 집권 3기도 러시아에 유리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한 어느 일방에 경사(傾斜)되지 않는 신중한 균형론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 제 2세션 (16:30 -18:20) : 특별 라운드 테이블
‘전승 70주년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한반도’

- 사회 : 기연수 (한러교류협회)
- 발제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패널 :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前 주러대사)
  Alexandr A. Timonin (주한 러시아대사)
  박 진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회외교통일 위원장)

전승 70주년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한반도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 머리말

o 한국정치사 및 소련·러시아 연구자로서 1945년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할 필요

o 한소 수교협상의 역사적 과정에 참가한 관계자로서의 감회

o 2015.5.9 모스크바, 대독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기대 (남북한 정상 초청)

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o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소련군의 대일전 참전(1945.8.8)→ 일본의 항복과 해방(1945.8.15) → 미소공동위원회 → 단독 정부수립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 개괄

- 전쟁기간중 미·소간 협력과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

o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접경지대로서, 동북아지역내 지배국가의 변동시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음

- 19세기이후 러일간 대결의 장 → 20세기초 러일전쟁과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는 미, 소의 영향권하에 들어가 냉전을 겪음

o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 구상의 전개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

o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의 유산과 전후처리 과정 비교

- 독일: 나찌 독일의 부정, 전후 독일의 사죄 및 주변국과 역사화해 노력

- 일본: 일본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o 한반도는 70년전에 전쟁과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한국인에게 그 피해와 상처는 아직도 남음(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3. 지난 70년간 한·러관계의 변천과 한러 양국의 교류협력의 전개

o 일제식민시기 연해주 등 구소련내 한국인의 항일 활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

o 냉전시기 : 한러간 교류의 제약,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구소련의 아시아정책의 변화

o 탈냉전과 1990년대 한소 수교: 정식 국교의 수립이후 한러간 교류, 협력의 급속한 증대

- 유라시아횡단철도 건설 구상, 한러 양국간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 한러 양국 유학생의 증가와 동해안-블라디보스톡 크루즈 여행(무비자)

o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실용적 발전 모색

-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 걸쳐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의 협력 확대

4. 맺음말

o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전망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양국의 과제

- 전쟁재발과 교류협력을 위해 한·러 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어떠한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

- 침략전쟁과 일본제국주의의 상처와 역사적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승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 러 양국의 정부, 지도자, 학계 및 민간차원의 할 일은?